

# 경기침체 수출에서 돌파구 찾아라

다음 달 기업체감경기가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나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다음 달 전망치 원지수가 82.7로 나타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3월(76.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자금조달 어려워

실제 경기 침체와 대외 경기 불안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5월 현재 예금은행에 남아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대출 잔액은 5조5,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7%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 기업 전체에 대출된 잔액은 5조 7,977억원으로 지난해 5월의 5조6,401억원보다 2.79% 늘었다. 전체 기업의 대출 증가율보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이 절반 이상 수준으로 떨어져 중소기업 대출이 그만큼 힘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금난에다 향후 경기전망까지 악화되고 있어 하반기 도내 제조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이 이를 만회해 줄 수

## 긴급진단 위기의 세계경제, 불안한 강원경제

### (1)총괄-도내 경기 전망

유럽발 경제위기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국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올해 유럽연합(EU)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308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수출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의 위기감을 더욱 커지게 하는 계사실이다. 강원도도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하반기 강원경제는 어떻게 될까. 강원일보는 6회에 걸쳐 각 업종별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진단한다.

## 상반기 10억달러 목표달성 올해 20억달러 성공 기대 건설분야는 수주액 2~3년 전 비해 반 토막 고통 가중 실생활 필요 품목 비롯 공공요금 인상 서민 더욱 압박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도와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수출은 9억9,000만달러를 넘어서면서 목표였던 10억달러를 사실상 달성했다. 하지만 유럽의 경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현재 하반기 수출 예측을 못 하고 있다.

무역협회 강원지부 관계자는 "통상 상반기보다 하반기 수출액이 더

많고, 도내의 경우 유럽수출보다는 남미국가와 러시아 등 신흥국가의 의존율이 높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표인 20억달러 달성은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상반기 건설수주액 반 토막

도내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분야는 올 상반기 종합건설·전문건설·설비건설 수주액 2~3

년 전에 비해 반 토막에 그쳤다.

최근에는 최저가찰제 등 정부의 공사금액 삭감 등에 따라 발주건수가 늘어도 수주금액은 오히려 줄어 고통이 가중되는데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사에 지역업체 우대방안 물거품 우려 등으로 하반기에도 시련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업체와 같은 소상공인들과 물가 쪽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도내 소상공인 경기 실적BSI는 81.9로 전달 103.6보다 2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또 라면과 헛반, 맥주 등 실생활에서 많이 찾는 품목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데다 하반기에는 전기요금과 각종 교통요금 등의 공공요금도 인상 대기 상태라 서민 생활을 더욱 압박할 전망이다.

업광열 강원무역장업연구원장은 "하반기 강원경제는 국내 GDP 성장률이 3%에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맞물려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그나마 수출 쪽이 버티주고 있는데 도가 9월 이후 극동러시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욱·원선영·하위윤·홍현표기자

# 정부 부처간 논란 공포일 연기

## 기재부·문광부 대립... 도, 시기보다 요구사항 반영 우선

### ((( ))) 포커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 공포가 당초 예정됐던 지난 27일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연기됐다. 강원도와 관련부처 간 이견으로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강원도는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 공포 시기와 쟁점, 강원도의 입장 등을 짚어봤다.

### ■언제 공포될까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은 국무총리실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 평창동계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되나

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5일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관련시설과 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후 27일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하려고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대회 관련시설 추가 및 국비지원 근거 명시 △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율 명시 △지역기업 우대 조항 명시 등 강원도의 주요 요구사항이 빠진 데다,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법예고안 중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처럼 강원도와 정부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빈껍데기' 논란을 빚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안은 내달 2일 차관회의에 상정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행령안이 내달 2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달 중순 공포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쟁점과 과제

도가 요구한 안전통제센터, 수송통제센터, 올림픽메달플라자, 식수 전용 저수지와 지역우대 조항 명시 등은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규정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어 무산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올림픽 개·폐회식장은 국내외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정부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

고 있어 대회관련시설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견 조율을 위해 도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차례 비공식 회의를 가졌지만 올림픽 개·폐회식장 건설 이외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도는 기존 대로 대회관련시설 추가 반영, 국비 지원근거를 명시, 지역우대조항 명시 등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강원도와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포 시기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시행령에 도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안되면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관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은복